

미 농업법 시한 만료로 우유 가격 폭등

미연방정부 업무 정지에 따라 각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으나, 10 월 1 일로 만료된 법률이 연방 농업법으로 이번 주에 미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업 부문과 관련되는 많은 일반인들에게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내년까지 이러한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뉴저지 농업 종사자와 소비자들에게 모두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유가격 두배로 폭등

극단적인 예로, 만약 새 법률안이 내년 1 월이 되기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농무부는 우유 농가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1949 년 이전으로 되 돌려야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 가격이 폭등을 거듭하여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8 달러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뉴저지 남부에 있는 무료 급식 단체에서 사외 이사로 일하고 있는 파멜라 퍼넛씨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저소득층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기본급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들이 우유값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제품, 곡물 농가 모두 피해 우려

만약 제때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제품 농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작물 보험금 손실에 따른 콩과 곡물 재배 농가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벌링턴에 소재한 럽거스대학 레이 새물리스씨는 과일과 채소 재배 농가에게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콩과 옥수수 재배 농가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상원과 하원의 견해차 심각

농업관련 법률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요즘 영양 보조 지원 프로그램(SNAP)으로 알려진 푸드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의 삭감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4 인 가족의 경우 매월 최대 668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경우 45 억불의 삭감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400 억불의 삭감을 승인한 상태이다.

미농무성 고유 권한 상실 위기

현재 농업법 만료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법률 만료로 미농무성의 고유 권한인 곡물 수출, 세계 식량 지원, 재해 구호와 같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농무성의 프로그램들은 농가들의 장기계획과 이에 따른 농가 이익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뉴저지 농업협회의 리즈 탐슨씨는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로 USDA 가 마비된 것이 단기적인

문제점이지만, 미하원이 계속 결론을 못내릴 경우 농업관련 법률의 만료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USDA 프로그램은 금융지원, 기간 건설, 설비 지원과 같은 농업 부문의 광범위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탐슨씨는 법률 만료에 따라 USDA 의 노력 농업인 영양 보조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노인층이 받는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지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USDA 의 농업 자원 보존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 부문 초당적 법률안 기대

미연방 농업협회 회장인 밥 스톨먼씨는 미하원의 정책적 결단의 부재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8 년에 연장된 법률이 또 다시 만료가 됨에 따라 농가들이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음 년도의 수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내년 1 월이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될 식품 가격 인상도 지적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 현실이 어려워 저도 농가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초당적인 법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